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

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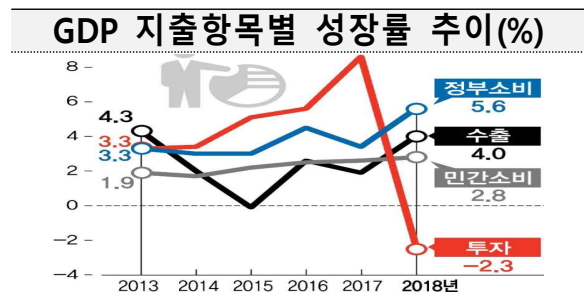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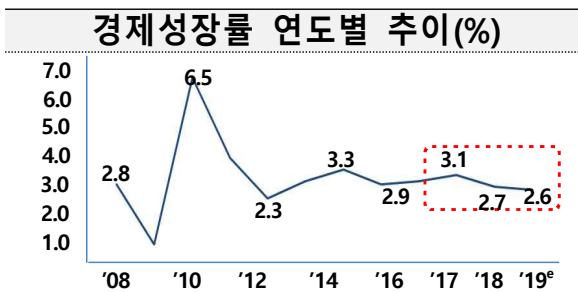
관 세 청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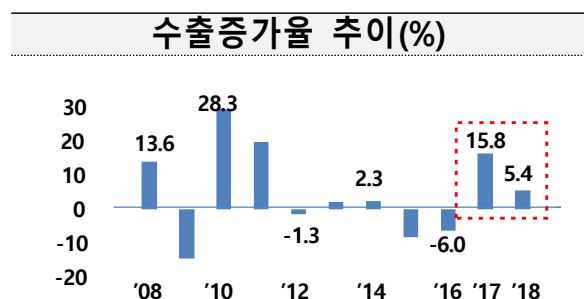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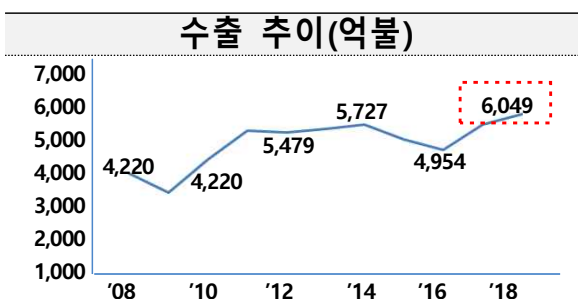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3
1. 수출 현황 /3	
2. 수출 지속율 /4	
3.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정책 현황 /5	
III. 관세행정 수출지원 대책	8
1. 유망 수출경로 수출지원 강화 /8	
(1)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절차 혁신 /8	
(2)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9	
2.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10	
3.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 지원 강화 /12	
4. 신속한 해외통관애로 해소 체제 구축 /13	
5. 무역통계 서비스 고도화 /15	
IV. 추진 이행 방안	17

I. 추진 배경

- (경제여건)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확산 등 수출여건 악화, 건설설비 투자 감소 등 국내수요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
- (경제성장 둔화) 대내외 여건 악화로 '18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7%^① 기록하였고, '19년 성장률도 2.5~2.7% 하향 전망^②
 - 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GDP감소효과(-0.9%) 세계 1위(미중 제외, IMF)
 - ② [한국은행] 2.7, [IMF]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6, [현대·LG 경제연구소] 2.5
- (부문별 성장율) '18년, 내수를 뒷받침하던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과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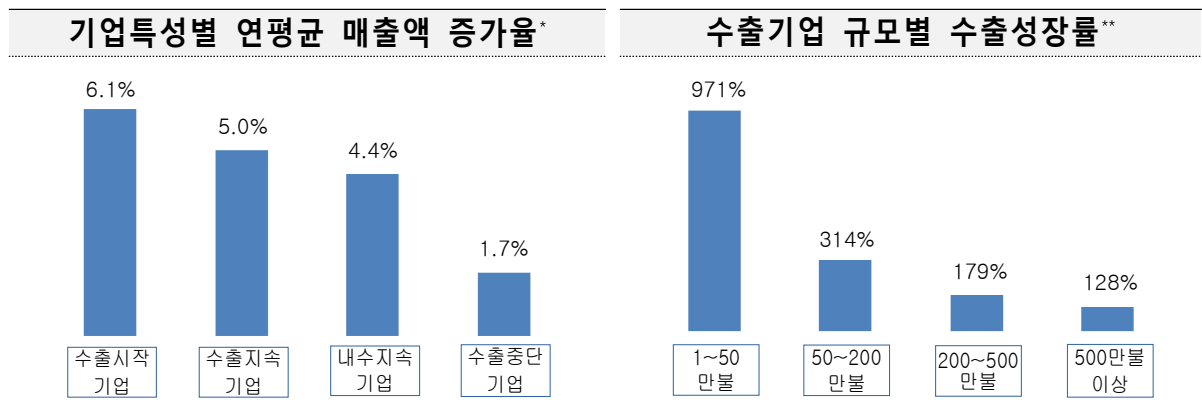
- (수출동향)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수출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수출증가율은 감소세로 우려 확대
- (그간의 수출 성과) '18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호조*로 사상 첫 6,000억불을 달성
 - * (반도체) 수출 1,000억불 최초 달성 (석유화학) 수출 500억불 최초 달성
- (불확실성의 심화) 미·중 분쟁 등 보호무역 확산,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 등 수출 전망 불투명



□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성) 수출지속 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고용창출을 뒷받침할 필요

○ (경제성장 기여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높은 매출 증가율, 소규모 수출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로 경제기여 효과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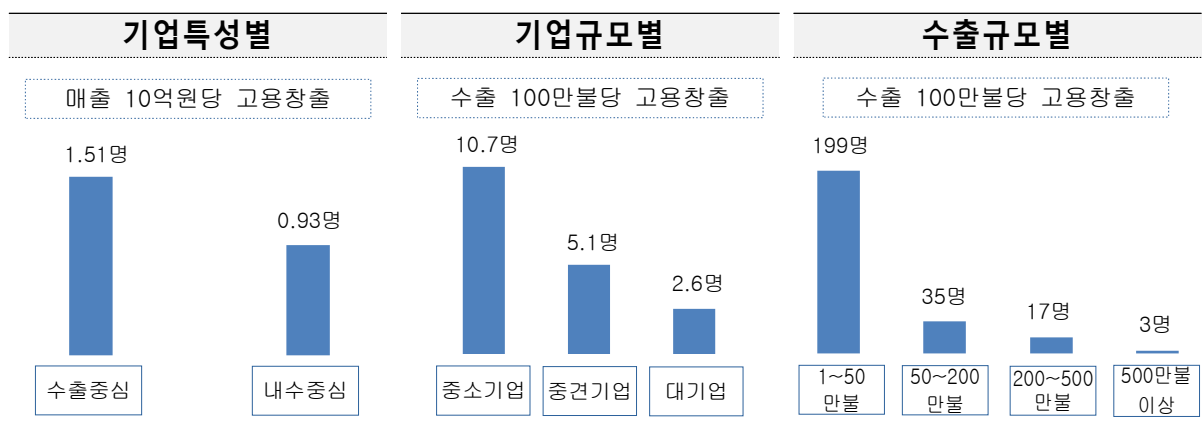
* 자체 정보 입수, 거래처 확보, 자금 조달 미흡으로 취약분야 지원 시 높은 성과 기대



* 한국무역협회, ** 관세청('12년 수출시장 진입기업의 5년간 수출성장률 측정)

○ (고용창출 기여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 대비 1.6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4.1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임

*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 유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한 성장 과정에서 보다 높은 고용창출을 유발



※ KOTRA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연구 보고서('18.5)

☞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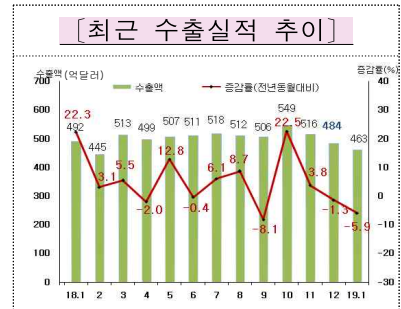
II. 현황 및 문제점

1 최근 수출 현황

- (총괄) '18.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 '19년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 상존

- 수출 증가율*도 '18.12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여 감소율이 확대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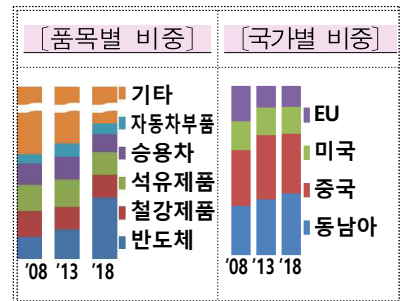
* ('18.11) 3.8% → ('18.12) △1.3% → ('19.1) △5.9%



- (품목·지역별) 상위 5개 품목의 수출비중이 47%로, 반도체 비중이 지속 증가한데 기인

* ('08) 7.8% → ('13) 10.3% → ('18)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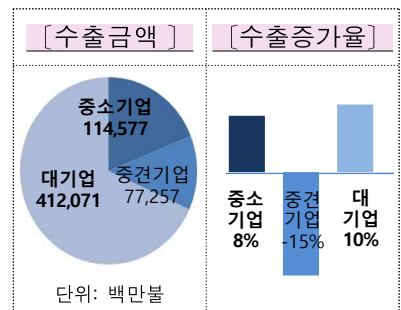
- 對中·對美 의존도(38.8%)가 여전히 높으나, '18년에는 동남아가 최대수출지역으로 급부상



- (기업규모별) 대·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동반 증가했으나, 중견기업 비중은 하락

- 수출기업 수는 중소, 중견, 대기업 順이나, 대기업(수출액의 68%) 중심 수출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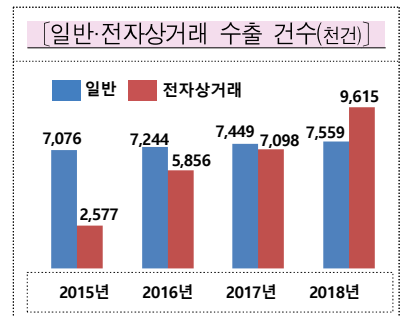
* ['18년 수출기업수] 중소 97.1% > 중견 1.8% > 대 1.0%



- (수출경로별) 전자상거래 수출이 건수로 일반 수출을 상회하는 등 新수출경로로 급성장

-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0.54%에 불과하나, 수출 증가율은 일반수출 대비 5배 이상 빠르게 증가

* [최근 3년 평균 수출 증가율] 전자상거래 25% > 일반 4.7%



☞ 대내외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강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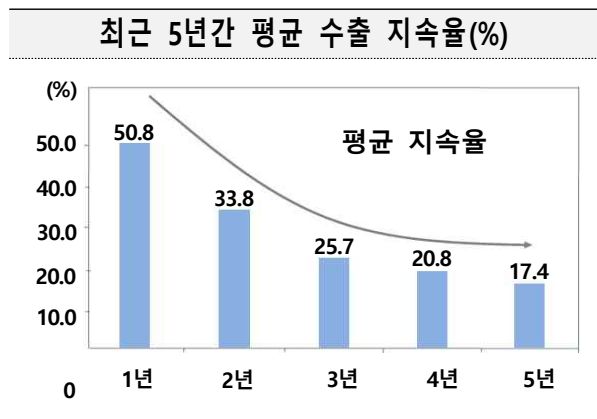
수출 지속율 현황

- (지속율) '16년에 수출을 시작하여 '17년에도 수출을 지속한 기업의 비율*은 49.4%로 과반수 이상이 1년만에 수출 중단

* '16년도 수출시장 진입기업 26,374개 중 13,029개(49.4%)만이 '17년에도 수출 지속

- 수출시작 이후 연차가 지날수록(1년차→5년차) 수출 지속율이 급감하여, 3년차에 25%, 5년차에는 17%만이 수출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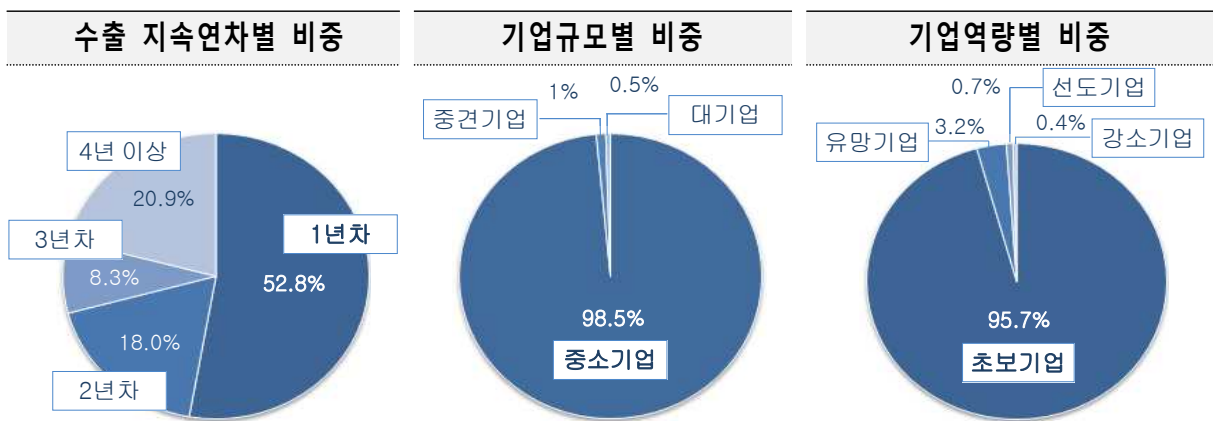
연도별 수출 지속율 현황(%)					
기준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3	51.8	33.9	26.3	20.8	17.2
'14	51.3	34.1	25.9	21.1	17.1
'15	50.1	33.7	25.7	20.7	17.5
'16	50.9	33.4	25.3	20.8	17.3
'17	49.4	33.1	25.1	20.5	17.6
5년 평균	50.8	33.8	25.7	20.8	17.4



- (퇴출율) '17년 수출을 중단한 기업 중 수출 시작 이후 3년차 이하의 비중이 79.1%로, 수출 지속·성장 여부가 초기에 판가름

* 수출 지속기간별 퇴출기업 : 52.8%(1년), 18.0%(2년), 8.3%(3년), 20.9%(4년 이상)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8.5%, 기업역량별로는 초보기업이 95.7%로 초보 중소기업이 수출 중단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수출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영세·초보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고용창출 촉진

[1] Needs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역통계 서비스

- (무역정보 수요 변화) 수출 기업·시장·경로 다변화 등에 따라 수출입업체, 관련기관 등 수요자별 Needs 다양화
- 공급자 중심의 포괄적인 집계성 무역통계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 및 수출지원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한계

수요자 그룹별 무역정보 요구사항

- | | |
|------------|--|
| ① (수출기업) | ① 수출 유망 국가·품목별 무역규모 등 해외 수출시장정보, ② 해외시장수요 급변 등 적시성 있는 무역 동향 정보 |
| ② (수출지원기관) | ① 지원대상기업 평가·선정지표, ② 해외진출지원 신규 콘텐츠(해외바이어 정보), ③ 지원사업 성과 평가 등을 위한 정보 |
| ③ (해외수입자) | 품목별 ① 국내 수출기업, ② 잠재적 수출가능 기업 정보 |

☞ 수출관련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무역정보(통계) 발굴·제공

[2]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출 지원책 요구

- (수출방식 변화) 전자상거래 수출건수는 일반 수출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일반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

* '18년 수출건수: 전자상거래 9,615천건(56%), 일반 7,561천건(44%)

** 빈번한 취소·정정·반품 및 해외배송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출시 어려움 가중

- 소액·다품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다수 판매건에 대한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제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 통관 이후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환급, 반품 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 및 입증서류도 복잡하고 과다

☞ 新 수출경로인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통관체제 구축

- (보세공장 활용 수출) 보세공장 수출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

* 보세공장 특허 현황(총 171개) :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53개, 중소기업 56개

- 특허요건*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는데 비해, 혜택은 반입원재료에 대한 과세유보에만 국한**되어 이용률이 저조

* 보세사 채용,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건이 많음

** FTZ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원자재·시설재 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진입장벽 완화, 혜택 강화로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활용률 제고

[3]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

- (FTA 수혜 불균형) 대-중소기업간 FTA 활용 격차*가 확대되고, FTA 활용 수출이익이 생산업체와 공유되지 않는 불공정 심화

* [대기업-중소기업 활용률 差] ('16) 14.9%p → ('17) 23.3%p → ('18) 23.0%p

-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활용에 한계

- (원산지검증 급증)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아국 수출물품에 대한 FTA상대국의 검증요청 급증* 등 FTA 관련 통관애로 지속 발생

* [상대국 검증요청 업체수] ('15) 295 → ('16) 228 → ('17) 814 → ('18) 636

-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검증·통관애로 대응 곤란

☞ 중소기업 중심으로 FTA활용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강화

-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전개*('08~'18)

* 지원금액(억원) : ('15) 3,025 → ('16) 3,150 → ('17) 6,728 → ('18) 7,077

-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드러난 이슈와 관련된 수입업체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출주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지원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세정지원 방안 마련

[4] 해외 통관애로에 대한 관세행정 수요 확대

- (해외 통관애로) 통관절차 지연, 검사 강화 등 통관단계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따라 아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지속 발생*

* 접수건수(건): ('16) 234 → ('17) 263 → ('18) 136 / 비용절감(억원): ('16) 546 → ('17) 741 → ('18) 515

- 관세관 부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한계*

* [애로해소건수, 배치 vs 미배치] ('16) 226 vs 8 → ('17) 243 vs 20 → ('18) 133 vs 3

- (품목분류 분쟁) 첨단 IT제품 등 新상품 개발과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세율, 원산지 결정요인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증가*

* ['07(최초접수)~'13] 26건 → [최근 5년('14~'18)] 51건

-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 해소 시까지 수출에 큰 타격

- (AEO 획득)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 제도의 세계적 확대 및 필요성에도, 공인·공인유지 비용부담으로 포기업체 발생

* WTO 무역원활화협정 체결('17.2)로 도입 의무화, 現 81개국 도입, 17개국 준비 중('18)

- 대기업에 비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공인 포기업체 집중*

* [포기업체 수, 중소 vs 대기업] ('16) 7社 vs 5社 → ('17) 19 vs 1 → ('18) 32 vs 4

☞ 신속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인프라 확충

Ⅲ. 관세행정 수출지원 대책

① 유망 수출경로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1]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 (진입장벽 제거) 특허요건 완화, 특허대상 범위 확대, 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으로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이용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의 인력·자금 등을 고려하여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
* 보세사 채용, 보세화물 취급 시스템 구축 → (改) 보세사 채용 유예, 자체 전산시스템 이용
- (세관절차 간소화) 보세가공을 위한 건별 통제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인한 물류 지체 해소 및 세관 통제에 대한 부담감 완화
 - 보세공장의 화물이동 단계(장외작업, 잉여물품 관리 등)에서 사전 신고절차를 완화하여 주기적·일괄 신고체제로 전환
- (세제혜택 강화) 관세감면 인정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한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면세 등에 감면조항 신설)(18년 기준 310억원 감면 혜택 제공 가능)
- (보세공장 특허 컨설팅)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절차, 혜택, 비용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수행
 - 특허, 재고관리 등 설치 운영 및 부담비용에 대한 자문과 함께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등 수출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2]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절차 혁신

□ (통관절차 혁신)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쉽고 편리한 One-Stop* 수출을 지원

*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연계하여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플랫폼에서 처리

○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 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57개→18개)한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

* 수출신고금액(200만원 기준)에 따라, 간이신고와 일반수출신고로 구분

○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HS코드가 생성 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고 애로사항 해소

○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우정본 배송정보를 변환하여 수출신고서 자동 생성 및 통관시스템에 전송되도록 구현

□ (물류배송 개선)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전용 물류창고를 구축 하고, 전자상거래 배송 환경에 맞게 화물관리 절차를 개선

○ 보관·통관·배송을 One-Place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19.연구용역)

○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건으로 일괄하여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는 배송체계 마련

□ (사후절차 지원) 반품 및 세금환급 절차 간소화로 업체부담을 절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품에 따른 재수입 시, 수출사실 증빙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반품처리 지원

○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없이 수출내역 조회 및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수출자가 부가세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수출내역 조회 후 환급

[1]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수출초보기업 집중 컨설팅) 관세청의 FTA 활용 컨설팅 사업 대상을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여 중점 지원

○ 최초 수출기업,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세관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까지 종합 컨설팅*

* 최초 수출기업 FTA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 예산의 40% 이상을 우선 배정

○ FTA, 통관, 관세환급, 외환거래 등 수출부문 전반에 대해 수출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전국 6개 본부세관에 118명의 공익관세사를 선발·배치하여 세관과 함께 무료 컨설팅

□ (FTA 활용절차 간소화) 원산지 판정이 용이한 특정물품에 대해 간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운영으로 관리부담 완화

○ 공산품의 경우,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 주도 상품군*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확대

* 증빙서류(12종)없이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

○ 원산지 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 등을 통한 ‘원산지간편인증’을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 확대

* 지자체가 직접 생산·유통 관리: 충남오감(충남), 전라미향(전라), 사이소(경북) 등

□ (원산지확인서 발급 활성화) FTA활용의 핵심인 원재료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C/O) 발급 유인체계* 구축으로 FTA 활용률 제고

* FTA 혜택(수출자)과 의무(원재료공급자)간의 비대칭성 해소

○ 대기업의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갱신)요건에 ‘협력 업체 원산지관리 지원’ 항목 신설

- (FTA 특혜관세 정보제공 확대) 복잡한 FTA 양허세율 정보를 알기 쉽게 분석·제공하여, 기업의 정확한 특혜관세 활용을 제고
 - 양허세율의 전환점이 되는 '5년차 진입 FTA 협정*' 대상, 신규 특혜대상 및 세율인하 품목 정보 제공
 - * 중국('19년, 수출규모 1위), 베트남('20년, 수출규모 3위) 등
 - 하나의 국가에 복수의 협정이 체결된 경우, 품목별 협정세율 비교*를 통해 적용 시 유리한 세율을 제공
 - * [예시] 베트남산 기어박스 부분품(8708.40) → 0%(한-베 FTA) VS 5%(한-아세안 FTA)

[2] 사전예방을 통한 FTA 특혜관세 추징 리스크 제거

- (원산지 사전판정) FTA 특혜세율 결정 요인인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하여, 사후 검증으로 인한 추징 리스크* 해소
 - * 상대국 수입자의 구상권 청구, 수출거래 단절, 과도한 검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등
 - 수출상대국이 간접 검증 체결국*인 경우,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권한을 보유하므로 사전판정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
 - *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EU 등 중소기업 수출 집중국가 포함
 - 직접 검증 체결국의 경우, 상대국 검증이 집중되는 취약품목에 대한 모의검증으로 기업의 안정적 FTA 특혜수출 지원
- (국가간 C/O 전자교환 확대) C/O 서면 제출없이 FTA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전자 교환체계를 확대(중국→주요국)*
 - * E-C/O 교환시스템 이후 한중 FTA활용 애로건수 급감 : 80건('16) → 29('18.11)
 -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아세안 5개국*과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연내 도입을 추진
 - * (우선협상 대상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모바일 기반 C/O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아국 및 상대국 세관 현장에서 즉시 진위여부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세정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 지원

*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② 부가세납부유예, ③ 환급지원, ④ 체납자회생지원, ⑤ 관세조사유예

○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지속 전개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無담보 납부유예*' 혜택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 유예,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하여 대기업이 주로 이용

□ (AEO제도 활용 제고) AEO 진입문턱을 낮추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MRA 체결로 중소기업의 AEO 제도 활용 극대화

○ 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유지 요건을 대폭 축소(462→121개) 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공인유지 비용 완화

○ 교역량이 크고, 통관애로 발생이 잦은 신흥시장 거점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하고,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이행점점 실시

* [체결국가 수] 現 19개국 →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인니 등 우선 확대 추진

□ (품목분류 사전확인 간소화) 신속한 품목분류 사전확인 심사 체계 도입으로 기업 불확실성 제거 및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

○ 긴급·중요*한 품목분류 결정(30일→15일) 및 無쟁점 HS 변경**에 대한 단축심사 활성화로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체계 마련

*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 요청,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 품목분류위원회 서면심의 만으로 고시변경 허용(현행 평균 처리기간 : 20.4일)

[1] 신남방 등 신흥 수출시장 통관애로 집중 해소

- (신흥시장 지원) 新남방·新북방 정책에 따라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 통관애로 집중 해소
 - 관세관 미파견 신흥국 해외무역관(코트라)에 관세전문가를 단기(1개월) 지원하는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 신설·운영*
 - * (추진방안) 운영방안 마련(상반기) → 시범운영(하반기, 1~2개국) → 확대운영('20~)
 -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한 고위급 회의 개최 및 분야별 전문가 지원팀* 파견 추진
 - * (사례) 베트남의 과도한 원산지증명서류 요구 관행에 대해 전담팀을 파견하여 해결('18.8)
- (관세관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관세관의 최우선 미션으로 설정하고, 관세관의 업무·성과관리 체계를 재설계*
 - * (예) 통관애로 해소건수 + 수출수요 정보 제공건수 + 기타 수출기업 지원활동 실적
 - 수출대상국 현지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발굴과 함께 관세당국과의 협력으로 해소 활동 강화
 - * 통관애로(최근 5년): [접수] 1,247건, [해소율] 91.3%, [수출기업 비용절감] 4,834억원
 - 상무관, 해외무역관과 협업을 통해 현지 관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간담회 개최 등 국내 기업(협회)과의 수출지원 소통 확대

[2] 국제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 (품목분류 분쟁 해소) 주요 분쟁발생국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등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 국가간 품목분류 분쟁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빈번 발생 국가* 대상으로 「분쟁·해결 상시 협의채널」 구축
 - * 주요 분쟁 발생국('17년):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 주력 수출상품* 또는 품목분류 논쟁이 높은 新상품**에 대해 WCO에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여 국제 품목분류기준을 선도

* LCD 셀, 모듈 등의 디스플레이 통합분류호 신설 추진 中(제8524호)

** 스마트워치: (한국) 무선통신기기(제8517호, 0%) Vs (상대국) 시계(제9102호, 5~25%)

- (부처간 무역장벽 협업 확대) 수출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애로사항 발생 시 대외협상력 제고

- 코트라, aT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분쟁, 통관애로 발생 시 공동대응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

* (예) 농식품분야 통관애로 공동대응을 위한 관세청·aT간 MOU 체결('19 상반기)

- 비관세장벽협의회* 활동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동해결 방안 논의 및 예방책을 마련

* 산업부 주관, 업종별 협회, 관세청, 무역협회 등 40여개 민관 전문기관으로 구성

[3] 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관세정보 서비스 제공

- (정보서비스 강화) 해외관세 정보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 제공하여 애로발생 예방

- 해외공관, 코트라 등을 통해 수집된 최신 해외동향·수입규제 정보와 통관애로 유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 정기적 제공

* (현행) 1회성 제공(미·중 무역분쟁 등) ⇨ (개선) 분기별 1회(시급한 정보는 수시 제공)

- (관리체계 개선)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통관애로사항과 고객 수요를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 관리방식 개선

- 현재 제한적인 해외통관애로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등록·관리시스템(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 (현행) 해소금액 있는 핵심통관애로 한정 → (개선) 금액없는 일반통관애로 포함

- 업체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로 통관애로 사항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분석·제공으로 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

[1] 수출지원기관 대상

□ (지원대상 검색 서비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보 연계로 품목·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발굴·검색 서비스」 제공

- 지원기관에서 지원대상 후보기업, 기업별 일반 현황 및 수출입 정보* 등을 업종·품목·지역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기업 신용등급, 재무현황, 고용현황, 공개 가능한 각종 수출입 관련 정보

- 품목·국가별로 해외 수입기업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출기업 지원시 조회·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마련

- 지원기관 수요에 기반하여 관세청의 수출입 정보와 신용평가사(NICE)의 기업·고용 정보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NICE 양자 간의 협업사업으로 추진

□ (지원사업 평가정보 서비스) 수혜기업별로 수출·고용 등 실질적 성과를 분석·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지원사업 평가 서비스」 제공

- 지원사업별로 대상기업을 등록하여 조회하면, 수출·고용 증감, 재무동향 등 주요지표의 변동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수출입(품목·국가별 정보 포함)·고용인원·매출 등의 실적 및 증감율 등 상세정보

- 기업별 지원사업 수혜이력을 제공하여 동일업체에 유사한 지원사업의 중복선정을 방지하고,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

- 국조실,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 및 지원사업 평가관리 부처에서 기관·사업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2] 국내 수출기업 대상

- (기업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수출시장 진입, 해외바이어 탐색 등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 개발·제공
 - 수출기업의 관심품목, 수출입급증 품목, 수출 유망국가 등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발굴·제공
 - 중소기업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출통계를 별도로 생성·제공하여 전자상거래로 수출 다양화 및 확대 지원
- (기업 Self 통계분석 서비스) 기업에 실효성 있는 신규 무역정보를 생성·제공하기 위한 기업 Self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 수출기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각종 무역통계 정보를 스스로 산출·분석(분석 Tool 탑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거래품명 기반의 다양한 수출입동향, 기업특성 데이터에 기반한 수출유망 국가·품목 리스트 산출 서비스 제공

* Memory 검색 → Flash Memory, DDR2 Memory 등 품명별 통계 제공

[3] 해외 수입기업 대상

- (해외거래처 매칭 지원) 잠재적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수출계약을 지원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NICE 양자 협업으로 영문판 검색 시스템 구축
- 해외바이어가 업종·품목별 기업정보 및 수출실적 등을 확인하여 관심있는 기업을 선정·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
- 관심기업에 대하여 수출조건 등 거래상담을 원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해당기업에 자동연결할 수 있는 기능 구현

IV. 추진 이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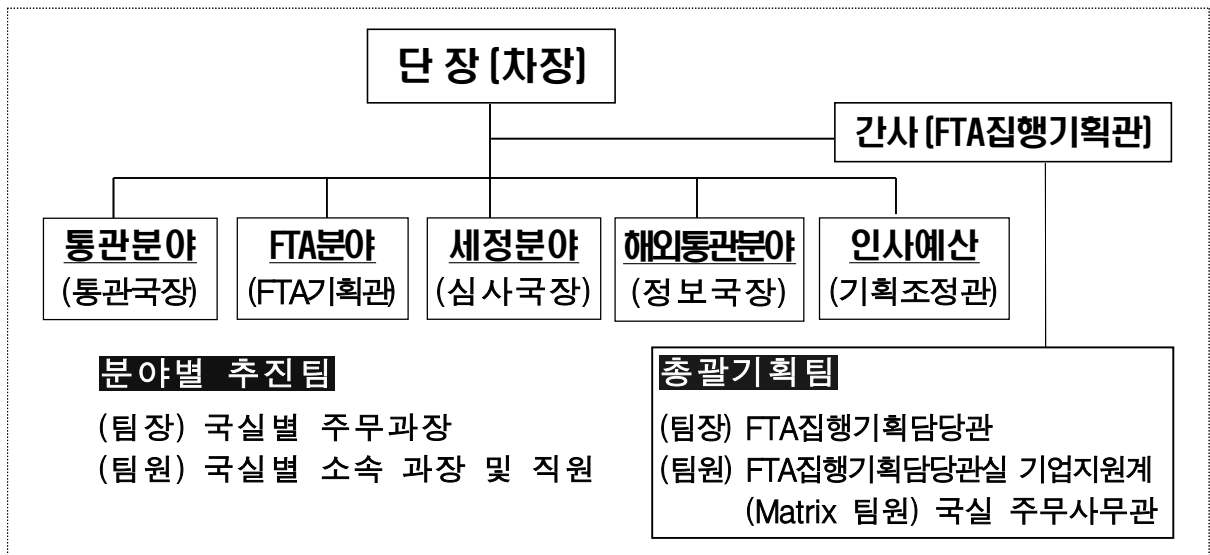
1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설치

□ (구 성)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대책 추진 및 이행을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

○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FTA집행기획관*(FTA집행기획담당관실)」이 지원대책의 추진 및 이행을 총괄 지휘·관리

* 현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휘 및 FTA 종합컨설팅 등 상시 지원업무 수행

<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구성(안) >



□ (운 영) 본청·세관의 분야별 지원대책 추진 및 이행성과를 관리

○ 전국세관장회의('19.3.6)에서 수출기업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분야별 추진대책 세부 액션플랜 마련 후 전국세관에 시달

○ 분기별로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 자원 배분을 결정*

*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능 개편, 지원 필요인력 보충, 예산배정 등

2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팀 설치

- (구 성) 전국 세관별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기업에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
- 본부세관은 세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이 본부세관 지원센터 및 산하 세관 지원팀을 지휘·관리
 - 산하 세관은 세관장을 팀장으로 FTA, 통관(해외통관애로 포함), 세정지원 전문가 등 3명(수출기업 지원관)으로 추진팀 구성

〈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팀 구성(안) 〉

인천	부산	서울	대구	광주	평택	수출입지원센터 • 산하세관 전담 관리자 편성
수원	김해	안양	울산	광양		상시 협력
안산	북부산	천안	구미	목포		
김포	양산	청주	포항	대전		
우편	창원	성남	속초	여수		
	마산	파주	동해	군산		
	경남남부			제주		
	경남서부			전주		4급지 세관 • 세관별 기업지원 담당자 3인 지정

- (운 영)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책 이행을 총괄하되, 산하 세관 추진팀을 지휘 및 지원하여 수출기업 지원 성과 창출

- 세관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내 수출유관기관, 협회 등과 「○○시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 구성을 협의 및 구축

* 지자체장 면담을 통해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지원기관 협의체 등을 활용

- 지역별로 수출기업^{*}(관세청)·내수기업(지자체)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원대상(품목·기업)을 선정하고 지원단 합동의 밀착지원 계획^{**} 수립

* 본청에서 시·군·구 단위로 수출기업 정보(주소, 연락처, 업종, 수출실적 등) 제공

** 기관별 지원책 취합 홍보, 설명회, 간담회, 기업별 1:1 종합 컨설팅, 애로사항 수렴 등

- 합동 지원단 주도로 지원대상 품목(업종) 관련 협회, 코트라, 재외공관 등과 정보공유 및 수출지원 협업 체계* 구축

*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 정보와 수출기업 매칭, 해외 전시회, 간담회 개최 등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능을 FTA 지원 위주에서 통관, 세정지원을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중심*으로 재편**

* (現) FTA지원係 + AEO지원係 → (改) 기업 종합컨설팅係 + 사후관리係

** 본부세관 內 통관, 납세환급, 품목분류 등 분야별 업무전문가로 구성

3 수출기업 지원 추진동력 확보

- (추진단 발족)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19.3.6, 전국세관장회의)하고 지원대책을 보고* 및 홍보

* 경제부총리, BH, 산자부, 중기부, 외교부 등

- (지자체 간담회) 관세청장 주재하에 17개 광역 시·도의 지자체 국실장 합동 간담회* 개최**('19.3월말 잠정)

* 지자체별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 운영 및 관세청 지원사항 등 논의

** 지자체 경제통상국장, 중기부 등 수출지원기관, 코트라, 산업별 협회 등

- (혁신 대표과제) 수출기업 지원을 '19년 관세청 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全廳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성공사례를 창출

- (기관장 주도) 세관장의 「기관운영보고서」를 통해 지원대책 이행 상황·성과를 점검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

*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지원을 요청

- (성공사례 창출) 일선의 기업지원 활동 추진에 동원 가능한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성과 창출시 우선적으로 포상금 부여

☞ 관세인, 핵심가치상을 수출기업 지원성과 사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성과창출 직원에 대한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시행